

경남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정책 만족도 및 지원 방안¹⁾

<u>01.</u> 경남 성폭력 피해자 정책 만족도 조사 개요	<u>02.</u> 성폭력 피해 및 신고 경험	<u>03.</u>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기관 이용 및 서비스 경험 여부	<u>04.</u>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요도 평가	<u>05.</u>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방안
---	---------------------------------	---	---	--------------------------------------

- 경남의 성폭력 발생은 2017년 1,355건에서 2021년 1,509건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검거율은 2017년 96.9%에서 2021년 91.7%로 5.1%p 감소함(경상남도경찰청, 2022). 또한 기존의 성폭력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관들 간의 운영 방식의 차이, 법률 및 수사 지원 서비스 부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전문성 위주(수사·법률, 의료 등)의 것들로 구성되다 보니 피해지원체계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약화됨. 이외에도 기관 간의 연계 부족,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 의료기관 부족, 사후 관리 미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점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남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용 기관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01. 경남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정책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함 따라서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내 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참여자를 확보함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 총 22개 기관의 협조를 얻었으며, 기관당 최소 피해자 1명에서 24명까지 조사하도록 독려함
 - 조사대상 확보가 어려운 조사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응답 달성도를 충족하였을 경우 설문조사 중복 탈락자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문항별 전체 응답자 수가 다름
 - 조사 응답자 수는 여성 200명, 남성 6명으로 총 206명이 응답하였고, 여성 200명의 조사 결과를 분석함

1)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성폭력 피해자 정책 만족도 및 수요조사」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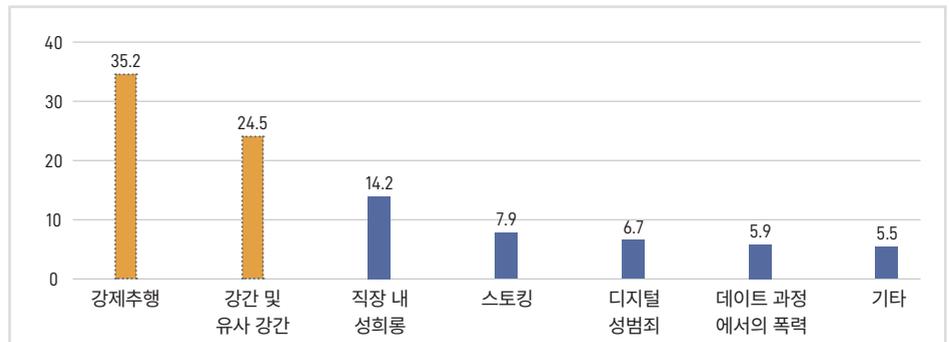
02.성폭력 피해 및 신고 경험

■ 성폭력 피해 유형

- 최근 신고(또는 상담)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유형을 질문한 결과, 강제추행이 89명(35.2%), 강간 및 유사 강간 62명(24.5%), 직장 내 성희롱 36명(14.2%), 스토킹 20명(7.9%), 디지털 성범죄 17명(6.7%), 데이트 과정에서의 폭력 15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1 최근 신고(또는 상담)한 성폭력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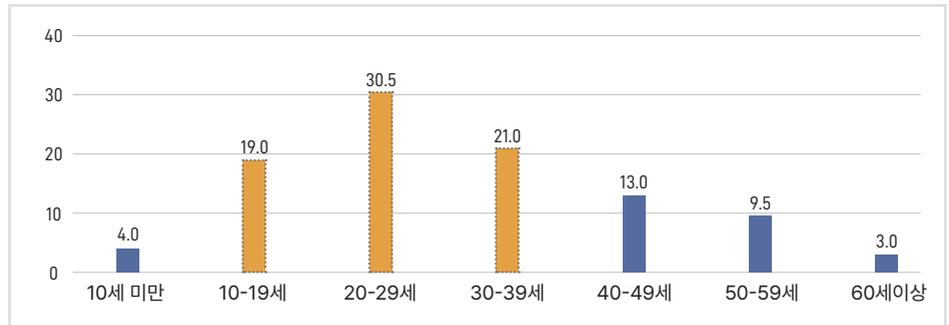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당시 연령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연령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대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21.0%), 10대(19.0%), 40대(13.0%), 50대(9.5%), 10세 미만(4.0%), 60세 이상(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2 성폭력 피해 당시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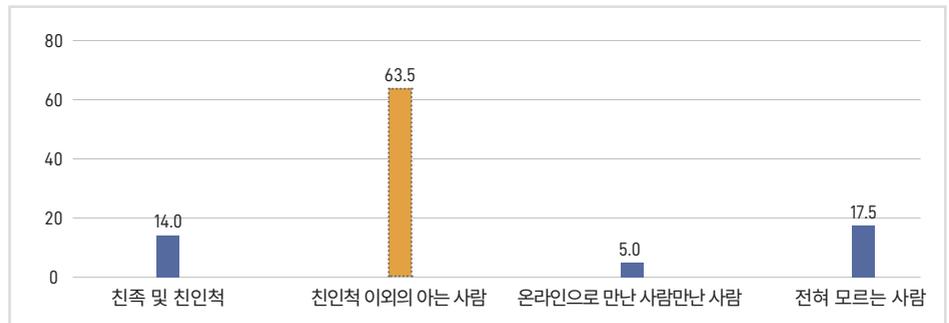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 피해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를 '친족 및 친인척/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63.5%), 전혀 모르는 사람(17.5%), 친족 및 친인척(14.0%),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5.0%) 순으로 응답이 많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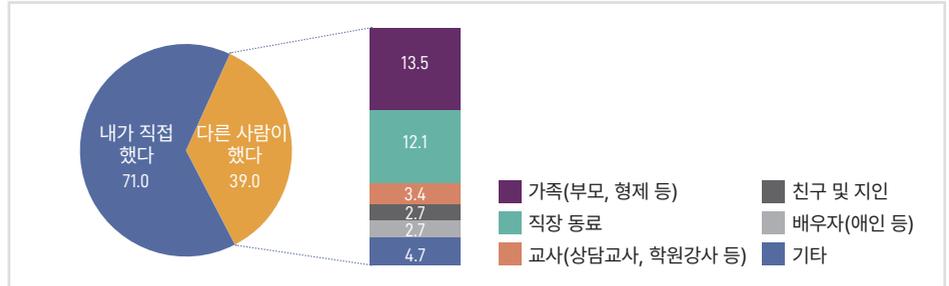
그림3 성폭력 피해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 사건 신고자

- 성폭력 사건 당시 누가 처음 신고(또는 상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142명(71.0%)이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8명(39.0%)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해줬다고 응답함
-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고 응답한 58명의 경우, 가족(부모, 형제 등)이 신고했다는 응답이 20명(3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및 지인(18명), 직장동료(5명), 배우자·교사(4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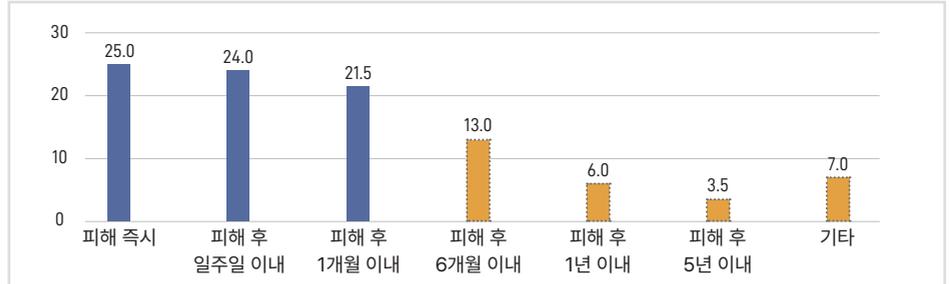
그림4 성폭력 사건 신고자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



■ 성폭력 피해 후 신고(상담)한 시기

- 성폭력 피해 후 언제 신고(또는 상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 즉시라는 응답이 50명(2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해 후 1주일 이내(24.0%), 피해 후 1개월 이내(21.5%), 피해 후 6개월 이내(13.0%), 피해 후 1년 이내(6.0%), 피해 후 5년 이내(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피해 후 1개월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가 전체의 29.5%로 나타나 즉각 신고 체계 마련이 필요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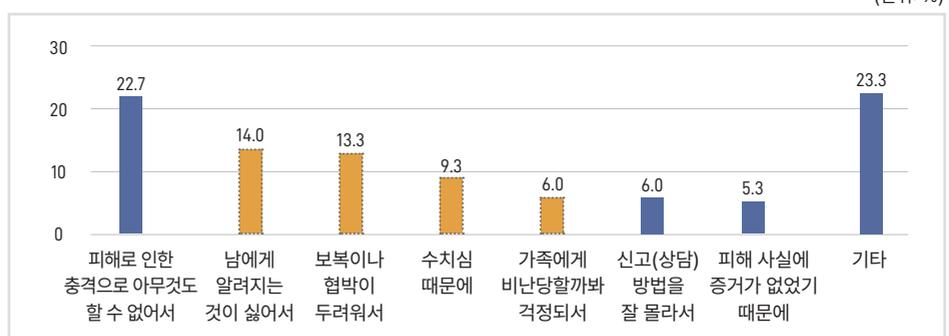
그림5 성폭력 피해 후 신고(상담)한 시기



■ 피해 즉시 신고(상담)하지 않은 이유

- 성폭력 피해 즉시 신고(또는 상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22.7%)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4.0%),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13.3%), 수치심 때문에(9.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타인과 가족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두려움 및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42.6%나 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방지가 필요함 (단위: %)

그림6 피해 즉시 신고(상담)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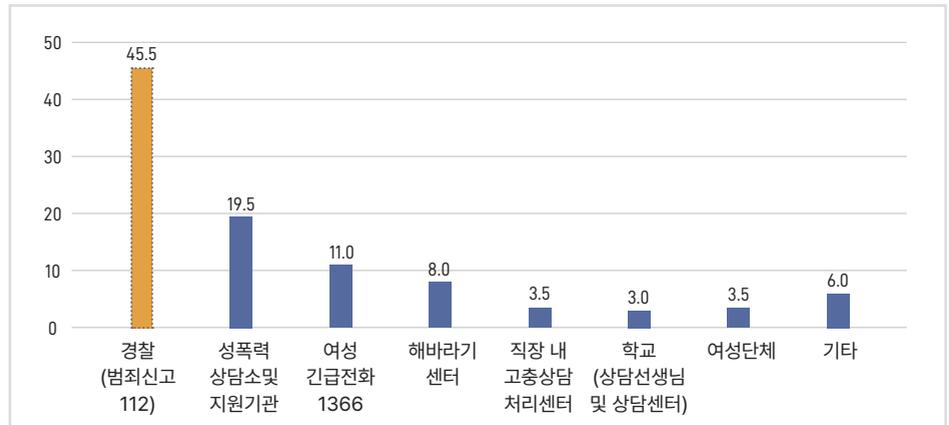
03.성폭력 피해 지원서비스 기관 이용 및 서비스 경험 여부

■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 기관

- 성폭력 피해 후 최초로 연락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200명중 91명(45.5%)이 경찰(범죄신고 112)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소 및 지원 기관(19.5%), 여성긴급전화 1366(11.0%), 해바라기센터(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7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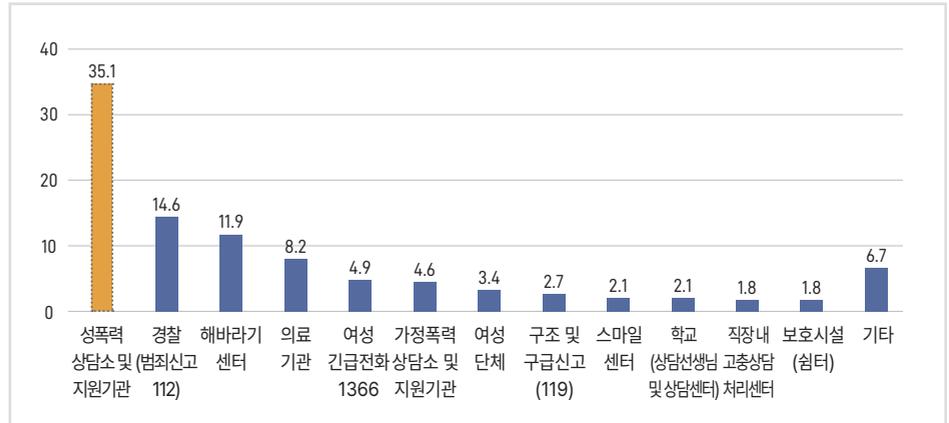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 기관 외 지원받은 기관

- 성폭력 피해 후 최초로 연락한 기관 외 지원서비스를 받은 기관 전체를 질문한 결과, 성폭력 상담소 및 지원 기관(35.1%), 경찰(14.6%), 해바라기센터(11.9%), 의료기관(8.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8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 기관 외 지원받은 기관(복수응답)



■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 기관의 도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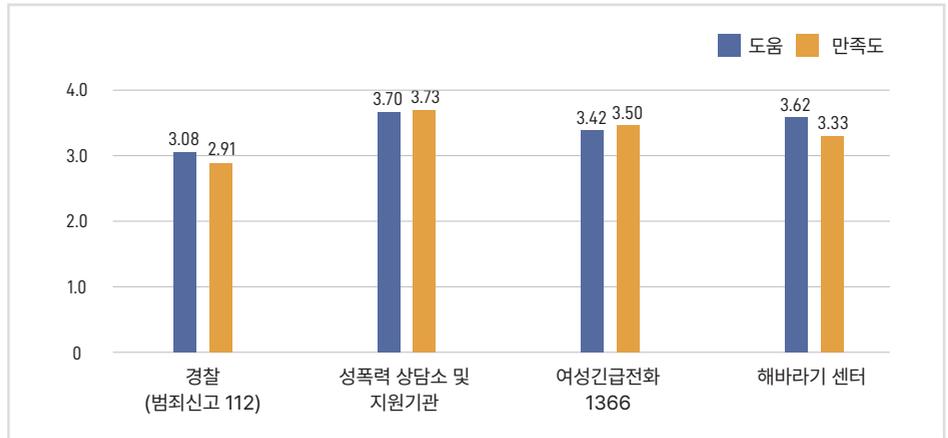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한 기관의 도움 정도를 응답 빈도가 많은 경찰(범죄신고 112), 성폭력 상담소 및 지원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도움 정도 및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봄

- 기관별 도움 정도를 4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성폭력 상담소 및 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가 3.7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바라기센터(3.62점), 여성긴급전화 1366(3.42점), 경찰 (3.08점)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기관별 서비스 만족도를 4점 만점의 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성폭력 상담소 및 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가 3.7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바라기센터(3.50점), 여성긴급전화 1366(3.33점), 경찰(2.91점) 순으로 나타남

(단위: 점)

그림9 성폭력 피해 후
최초 연락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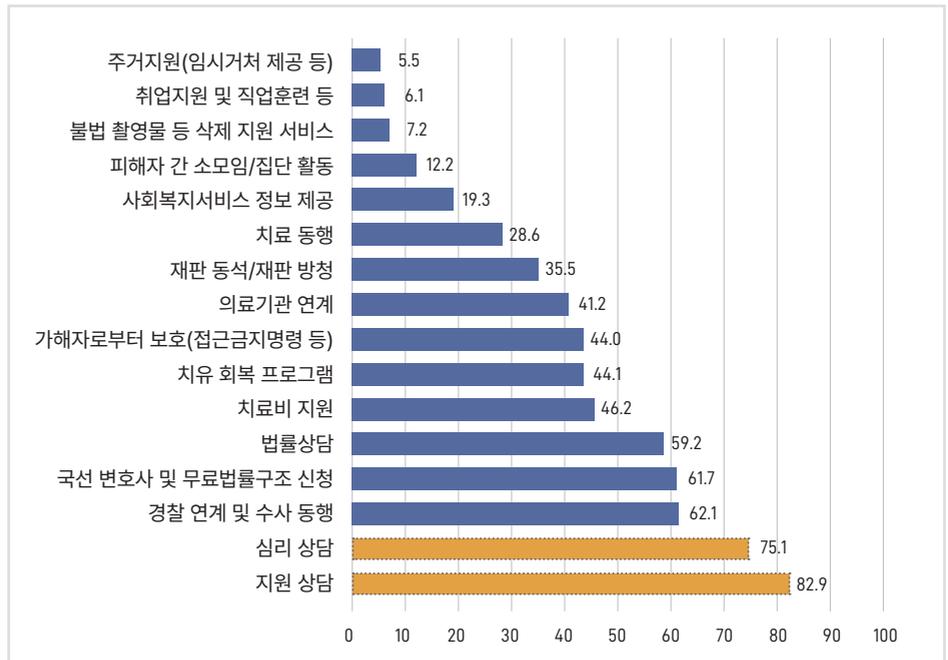
04.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요도 평가

· 성폭력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

- 성폭력 피해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지원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8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리상담(75.1%), 경찰 연계 및 수사 동행(62.1%),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 신청(61.7%), 법률상담(59.2%) 등의 순서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단위: %)

그림10 성폭력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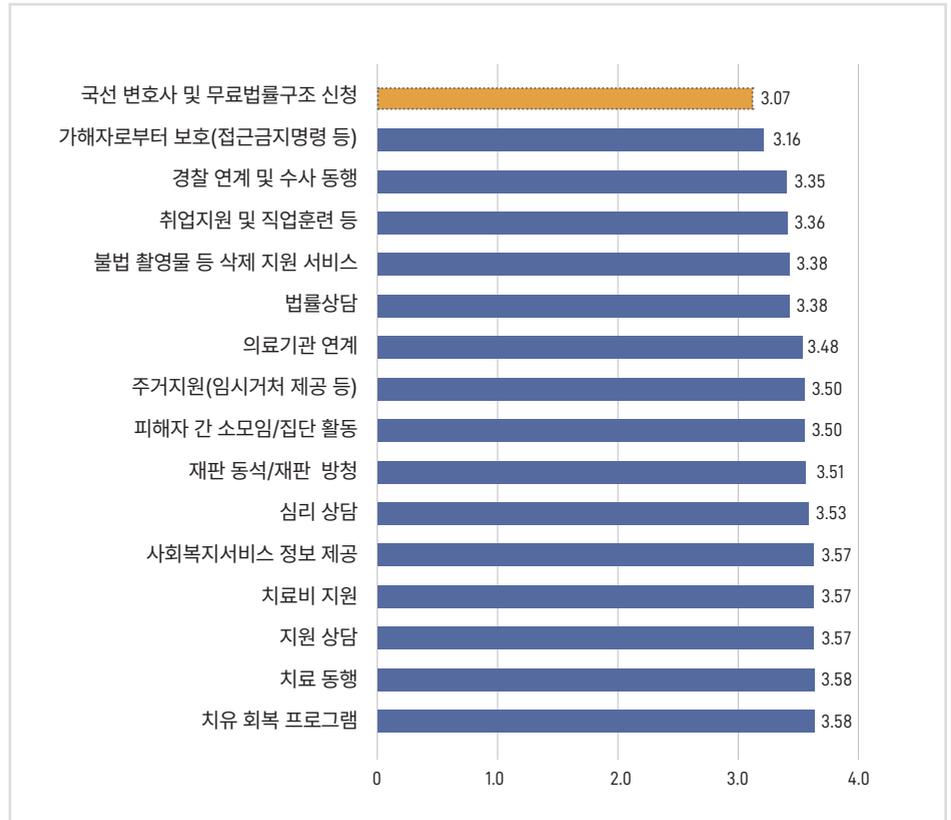


■ 성폭력 피해지원 서비스 만족도

- 성폭력 피해 후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 평균(4점 만점)을 비교해 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지원상담과 치료비 지원(각 3.58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치유회복프로그램, 치료 동행,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각 3.57점), 심리상담(3.53점), 재판 동석 및 재판 방청(3.51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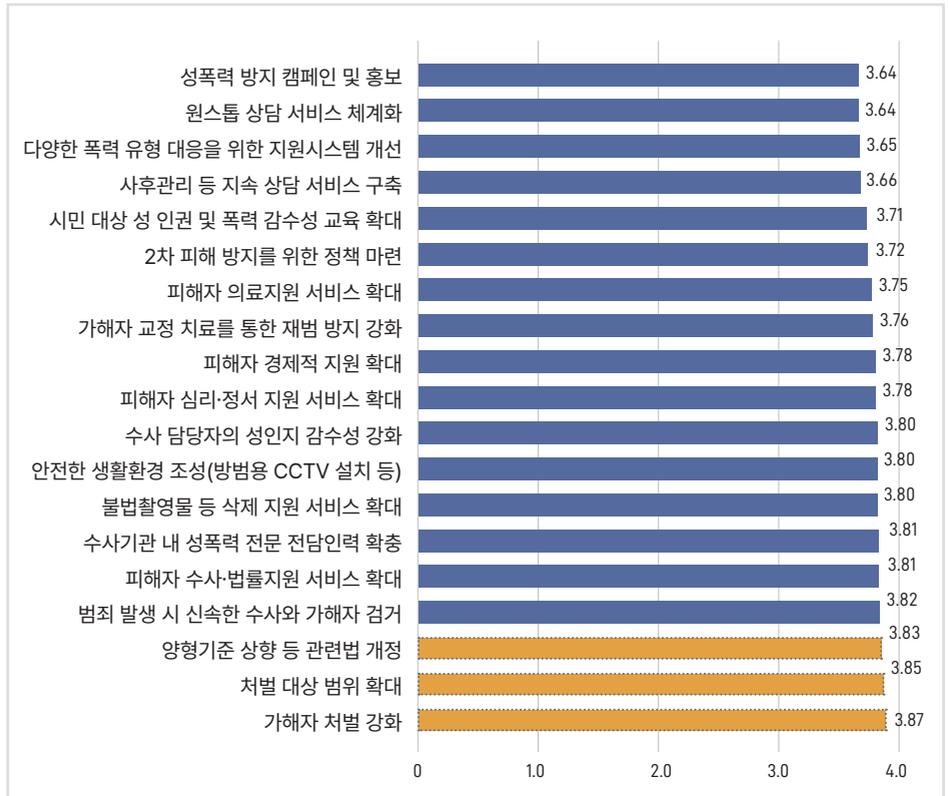
■ 그림 11 성폭력 피해지원 서비스 만족도



■ 성폭력 피해지원 정책의 중요도 평가

- 성폭력 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은 것은 가해자 처벌 강화(3.87점)로 나타남. 다음으로 처벌 대상 범위 확대(3.85점), 양형기준 상향 등 관련법 개정(3.83점), 신속수사와 가해자 검거(3.82점), 피해자 수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와 수사기관 성폭력 전문 전담 인력 확충(각 3.81점)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준 강화와 수사기관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정책들은 성폭력 방지 캠페인 및 홍보와 원스톱 상담서비스 체계화(각 3.64점), 다양한 폭력 유형 대응 지원시스템 개선(3.65점), 사후관리 등 지속 상담서비스 구축(3.66점)으로 나타남

그림12 성폭력 피해지원 정책별 중요도 평가



- 성폭력 피해지원 정책 19개를 '성폭력 피해지원 시스템 개선',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수사기관 개선', '처벌 수준 강화'로 구분하여 5개 영역의 중요도를 평균값으로 비교함
- 5개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처벌 수준 강화 영역의 중요도 평균이 3.8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사기관 개선(3.81점),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78점), 사회적 인식 개선(3.72점), 성폭력 피해지원 시스템 개선(3.65점)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음

그림13 성폭력 피해지원 정책 영역별 중요도 평가



05.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방안

- 경찰 연계 및 수사 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찰공무원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성인지 교육**

 - 경찰공무원의 경우, 4대 폭력예방 교육의 하나로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된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들긴 하지만 이는 직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교육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심리 이해, 그리고 피해자 욕구, 수사과정에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을 다루는 경찰공무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경남도내 성폭력·가정폭력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조사와 초점 집단면접을 통해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확대**

 - 심리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치료회복프로그램에 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상담 횟수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심리상담을 비롯한 집단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청소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회복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확대 사업이 필요함
- 도내 성폭력 법률 자문단 구축 및 운영**

 -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사·법률 관련한 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부족,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정보를 자문할 수 있는 법률 자문단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우선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상담소와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상담소 연계 강화)**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발생시 적절치 못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와 경찰, 지원기관들의 개별적 대응으로 신고 후 후속 관리가 미흡하거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책의 한계점이 가장 드러나는 시기가 초기 대응 단계이기도 함
 - 경찰과 성폭력 전문가, 법률 자문단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을 비롯해 복지 지원, 그리고 지원기관 연계 등을 동시에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피해자 초기 대응 수준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및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초기대응 향상과 함께 상담소 연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지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할 수 있음